

## 16.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9월 6일
- 발의의원 : 하병문, 강민구, 김재우, 김지만,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정천락,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 상정일자 :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년 9월 20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하병문 의원)

####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시행(안 제4조~제5조)
- 대구창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조)
- 혁신창업협의회 설치·회의 등(안 제8조~제9조)
-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 등(제10조~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하종선)

#### ☐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기술창업 촉진 및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적법성 여부

-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 기술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술창업 현황 및 여건 분석, 정책 방향·목표 및 추진 과제 등을 골자로 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 사업추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6조에서는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2016. 4월부터 대구창업지원포털을 구축·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창업자 맞춤형 및

지원기관과 연계한 정보 제공, 지원사업 성과관리 DB 구축,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구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사업(~2020.7월)을 추진 중에 있음.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현재 기 운영 중에 있는 대구혁신창업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관련 사항 등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 하였고.

\* 대구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각종 창업지원 기관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간 연계·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협의회 내 2개 분과(창업육성/금융·투자)를 두고 있음.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시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과 조사·감독 근거를 규정 하였고,

\* '14.4월 개소하여 '16.12월에는 대구삼성창조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3본부 (창업허브운영본부, 창업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총 44명 근무 중,

'19년 기준 예산액은 51.8억원(국비 26.8, 시비 25)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신설에 따라 기존 「재단법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기술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속성장 시기 이후 섬유 등 주력 전통산업의 경쟁력 저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재편 지연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특히, 경제활력 저하와 함께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ICT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기술기반 창업환경 개선과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의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술창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기술창업 관련 정책동향을 보면

정부는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 촉진, 제도전 인프라 확충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음.

## 《 정부의 주요 창업 활성화 추진대책 》

- 2017. 1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 2018. 1.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 2018. 2.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
- 2018. 5.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2019. 3.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 2019. 6.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대구시에서도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계기로 창업 지원공간 및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창업공간 및 지원사업 현황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목표) |
|-------------|------|------|------|------|------|----------|
| 창업공간(개)(누적) | 525  | 531  | 553  | 732  | 700  | 773      |
| 창업지원사업 수(개) | -    | 40   | 41   | 42   | 41   | 51       |
| (지원예산:억원)   | -    | 341  | 318  | 364  | 373  | 479      |

2019년 기준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보면 창업 예비단계 15개 사업 286억원(59.7%), 초기단계 28개사업 115억원(24%), 성장단계 8개 사업 78억원(16.3%)임.

\*\* 지역 창업허브로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조성(900억원, 민자, 완료),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320억원, 건립중), 벤처스타트업펀드·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스타벤처 육성 등 창업 이후 성장지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등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 그러나 그간의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며 지역경제 전반을 변화시킬 만한 혁신적인 성장 동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기술혁신 주도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 별다른 직업선택의 기회가 없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과 달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

\*\* 핀란드 66%, 미국 54%, 영국 53%, 프랑스 50%, 중국 43%, 한국 21% (OECD, '14)

창업 및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전국평균 대비 대구 지역의 낮은 창업 증가율\*\*도 지속되고 있음. 또한, 대형 성공사례 부족, 실패에 따른 위험 부각,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신설법인 수도권 비중 : ('14)61.2% → ('15)60.9% → ('16)61.5% → ('17)60.2%

벤처투자 수도권 비중 : ('14)77.0% → ('15)76.9% → ('16)76.7% → ('17)75.9%

\*\* 대구 '14~'18년 신설법인 수 증가율(전년대비)은 '17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평균 하회, '17~'18년 창업기업 수 증가율(전년대비) 모두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차별화된 창업분야 선정 및 지원시책 설계, 원활한 자금 유입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창출 및 홍보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술창업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조례인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 혁신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고 창업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li> <li>◦ 기술창업 지원사업(51개)의 각 기업별 지원 타당성을 검증하려면 협의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는 기술창업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로 기존 조례의 별도 운영 필요성이 크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li>◦ 협의회 역할은 전체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지원기업 결정은 각 사업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됨.</li> </ul> |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